

정은경 장관 “2027학년도 의대정원 내년 초까지 확정”

전남의대 등 신설 공공의대, 별도 정원 배정 가능성

“국민연금기금 규모 커져…운용방식 고민할 시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수급주체위원회 논의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남

방인을 추진했지만 의견 갈등으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다시 현 수준으로 돌린 바 있다. 2027학년도부터는 추계위 결과

를 토대로 정원을 다시 조정한다.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 취약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의대 부재로 인해 의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전남 의대 설립’은 지역 최대 협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첫째인 만큼 실제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의료 수요 분석과 전공 기피과 매칭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 의대 신설을 예상하는 경우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증원 가능성을

설의 당위성과 구조적 연계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 정원 조정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교육·수련·정책까지 이어지는 의학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며 전남 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힐지 못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경우 비수도권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과 예산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 장관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어린이집 등 인프라가 많이 줄어 (양

유) 비용이 더 드는 문제도 있으니 1년~2년 만원 정도 우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우대로 볼 것이다 (수도권) 차별로 볼 것이나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뭐가 더 맞나보다는 어떤 것을 중점적인

가치로 볼 것”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관련 법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식 시행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1월 1일자부터 적용해 소급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 장관은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해서는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운용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이현규 기자 gnews1@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발대식 2일 광주 동구 금남로 YMCA앞에서 열린 동구기독교단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발대식에 참석한 임택 등구청장과 내빈들이 모금함에 성금을 넣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선거구획정위, 남구·광산구의원 선거구 조정

남구 ‘나선거구’ 3인→4인, ‘다선거구’ 3인→2인

광산 ‘가선거구’ 4인→3인, ‘마선거구’ 3인→4인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남구와 광산구 선거구를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2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회원회는 최근까지 제4차 회의를 갖고 지난 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자치구의원 정수 배분 및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광주시에 제출했다.

주요 의결안은 남구 ‘나선거구’를 현

행 3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대신 ‘다

선거구’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였다.

광산구는 ‘가선거구’를 4인에서 3인

으로 축소하고, ‘마선거구’를 3인에서 4

인으로 변경했다.

또 회정위는 인구와 등(洞) 수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적용하던 의원

정수배분 기준을 인구 대표성 비중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지를 줄이기

위해 인구 60%·동수 40%로 변경했다.

남구는 해당 인구·동수 기준 변경에

맞춰 조정됐지만, 광산구는 기준대로라면 현행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회정위는 광산 가선거구가 인구 7만6524명(동 8개) 인데 비해 마선거구는 인구 10만1951명(동 3개)으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커 인구대표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 광주시의회에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될 수 있어, 시의회

의 동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회정위는 별도의 특별결의문을 제택했다. 결의문에는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의회는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공직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담았다.

이밖에도 정치 다양성 강화 입법 취지를 살려 공직선거법 개정, 회정위의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 선정 권한 부여,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시기 조기화(지방선거 12월 1일), 회정위에 기초 의원 정수 결정 자율성 부여 등을 건의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 대통령, 오늘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 일로,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이겨낸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상징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서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설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극복 및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현법재판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아리랑 7호 발사 성공…첫 교신·궤도 안착

베가-C서 44분 뒤 분리, 69분 만에 남극 트롤기지와 교신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디모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한국 시간으로 2일 오전 2시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아리랑 7호는 발사 44분 후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1시간 9분 뒤 남극 트롤을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항우연은 남극 트롤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의 초기 상태를 확인하였고, 발사체 업체를 통해 목표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초기 교신에서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으며 우주정은 지상국 교신 4차례 진행 후 최종 발사 성공을 발표했다.

아리랑 7호는 궤도상시험과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리랑 7호는 0.3m 크기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카메라를 통해 해재·재난·국토·환경 감시 및 공공안전, 도시 열섬현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이다.

연합뉴스

노리호 4차 발사 위성 교신 현황

11월 27일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노리호 4차 발사 탐지위성

주탑재위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차세대충돌위성 3호

● 11월 27일
오전 1시 55분께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양방향 교신

부탑재위성
쿠브위성 총 12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센
● 11월 27일
인하대
인하로켓
● 11월 27일
세종대
스피어온
● 11월 28일
한컴인스페이스
세종4호
● 11월 28일
우주로더크
코스믹
● 11월 29일
서울대
스노글라이트-III
● 11월 29일
스페이스린텍
▲ 비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국산소자부품 우주증증 플랫폼 1호

*개별 지상국과 각자 교신하도록 교신 시점 각각 다른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면 ‘격변 소용돌이’서 계속

향엽 의원 등이 돋보인다. 원외로는 이병훈 전 의원, 김성장 흥군수 등이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 호남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들 사이에 지역 곳곳을 훑고 다녔던 정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호남발 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 의원)’를 꾸려 호남에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실현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아울러 전임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과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3대 특검’을 본격화하며 계엄 잔재 청산에 나서는 한편 지방분권제 강화, 미래산업을 위한 AI(인공지능) 산업 투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2·3 사태 1주년을 맞고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인정은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마저 선언하지 않고 있어 정치적 긴장 상황은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감사 자료 과다” vs “정당한 권리”

공무원 노조, 피켓 시위…남구의회, 성명서 발표

광주 남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의회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남구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49조가 규정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요구는 법으로 보장된 의회의 핵심 권리”라며 “어떤 형태의 사전 협약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의 자료 요구를 2025년도 실제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특정 연도 실적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사업의 전 과정을 살피기 위해 직전·전연 연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의 통상적 감사 방식이다”면서 “2023~2024년 자료 요구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남구의회는 집행부가 제안한 ‘자료 요구 범위 조정 합의서’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출을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성실 협조 의무 위반으로, 감사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기초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요구’를 비판하며 자료 요구 가이드라인 마련과 행감 기간 조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일정이 모두 오후로 미뤄졌다.

한편 노조는 매일 오전 남구청 앞에서 의회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알림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수료식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수료식이 12월 4일(목) 오후 6시 호텔 아트하임 지하 1층 대연회장에서 열립니다.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는 지난 3월 개강이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연간 9차례의 수준높고 품격있는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원우기업탐방과 문화탐방,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등 원우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해 지역사회 최상급 비즈니스장소 구축해드렸습니다.

광남일보는 올 한해 아카데미 원우 여러분이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을 지닌 최고지도자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수료식에 광남일보 1~12기 동창회 회원들과 제13기 원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저녁 6시

△장 소 : 호텔아트하임 지하 1층 대연회장

△기 타 사 항 : 오후 6시부터 석식제공 (8층 레스토랑)

△문 의 :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국 (062-370-7090)